



법과 정치

1. 정치의 의미

정답 ③

ㄴ. 을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이해하므로,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 현상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ㄷ.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든 넓은 의미로 이해하든 대립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한다. ㄱ. 갑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의사 결정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 시민 혁명기 역사적 문건

정답 ④

(가)는 영국의 명예 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리 장전이고, (나)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권 선언이다. ㄱ. (가)의 제1조는 군주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군주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보여 주고 있다. ㄴ. (나)의 제1조는 천부 인권 사상, 제2조는 사회 계약 사상, 제3조는 국민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ㄷ. (나)의 제2조에서는 압제에의 저항, 즉 저항권이 인간의 소멸될 수 없는 권리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3.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

정답 ①

A는 직접 민주 정치, B는 간접 민주 정치이다. ㄱ.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는 참여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ㄴ.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치 기능이 확대되면 모든 구성원이 전문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 ㄷ.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한 것은 직접 민주 정치이다. ㄹ. 간접 민주 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4. 법치주의

정답 ②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인정한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한다. ㄹ.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5. 정부 형태와 정당제

정답 ⑤

⑤ 다당제는 다양한 정당이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간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쉽다. ①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이 가능하다. ②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다양한 민의의 정책 반영에 유리하다. ③ 다수당의 횡포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때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이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쉽다.

6. 정당별 의석 분포의 해석

정답 ③

③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나라는 연립 내각의 구성이 불가피한 C국이다. ① A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보수 정당인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 있다. ②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C국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단독 내각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④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B국에서 보수 정당이 70%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수당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상황이다. ⑤ 여소야대 정국인 A국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C국은

연립 내각 구성이 불가피하므로 강력한 정책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 대통령과 국회

정답 ⑤

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ㄷ.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가 될 경우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ㄴ.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환부 거부권을 가진다.

8.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정답 ③

(가)는 이익 집단이고, (나)는 시민 단체이다. ③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① 이익 집단의 등장 배경으로는 이해관계의 다원화, 지역 대표제의 한계, 정당 정치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② 시민 단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권력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④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활동의 활성화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9. 헌법의 기본 원리

정답 ④

밀줄 친 부분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ㄴ. 국가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 의무 조항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10. 기본권의 특징

정답 ③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참정권이다. ③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이고,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① 천부 인권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④ 자유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11. 위헌 법률 심판

정답 ②

②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대법원도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① 다른 공무원보다 청원경찰에게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③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 법률 심판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2. 민법 원리의 변화

정답 ②

ㄱ.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원리인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ㄷ. 과실 책임의 원칙이 사회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약용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 원칙이 도입되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은 (나)에 적용된 무과실 책임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ㄹ. 계약 공정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 모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답 ④

④ 갑이 우선 변제권을 갖춘 시기가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한 달이 앞서므로 갑이 □□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①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 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 ②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구에 기재된다. ⑤ 갑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경매를 통해 ○○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14. 형사 재판

정답 ①

①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에서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을 H씨가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사와 H씨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③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고등법원이라는 것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임을 알 수 있다. ④ ㉠은 형벌이지만, ㉡은 보안 처분이다. ⑤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1심 재판부는 H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15.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

정답 ④

④ 15세 미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① 을은 미성년자이지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은 합의 시에는 1주에 6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⑤ 최저 임금은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16.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정답 ⑤

A는 유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상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17.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

정답 ⑤

(가)는 사용자 배상 책임 사례이고, (나)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배상 책임 사례이다. ㄴ. 공작물 점유자인 A가 수차레 B에게 보수를 요청한 것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ㄷ. 사용자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 공작물 소유자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ㄹ. 사용자 배상 책임과 공작물 소유자 배상 책임은 모두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ㄱ. 을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더라도 과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8. 상속 순위와 상속액

정답 ④

ㄴ. 병과 정 의 상속분 합은 8억 원이고, 을 의 상속분은 6억 원이다. ㄹ. 민법상 직계 비속의 상속 순위가 직계 존속보다 빠르므로 갑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ㄱ.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친생자 병과 정, 그리고 양자 무이다. 배우자인 을은 직계 비속인 자녀보다 50% 많다. 그러므로 을과 자녀 병, 정, 무는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으므로 을의 상속분은 6억 원이다. ㄷ. 양자인 무와 친생자인 병과 정 의 상속분은 같다.

19.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성격

정답 ④

(가)는 근로 기준법, (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회법으로 분류된다. ㄴ. 사회법은 사회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ㄹ.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ㄱ. 사회법은 계약 공정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등을 토대로 한다. ㄷ. 사회법은 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20. 범죄의 성립 요건

정답 ①

ㄱ. 긴급 피난 사례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ㄷ. 심각한 정신 분열증 환자의 무차별 폭행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ㄹ. 자신의 물건을 자신이 훔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